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경|영|저|널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메디아트 성형외과

얼굴 · 종아리 성형  
지방이식

TEL: 053)621-7582

## 한국경제기획연구원



**COVER STORY** //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정책제안** // 도시주택정책, 지방에 권한이양해야

**기획특집** // 대규모정책연구용역 의뢰업체 밀어주기 지나치다

**인물FOCUS** // 가족분노처리세계적인권위자, 상주공무원황인우씨

**테마산책** // 강원도 가을축제

**저자체는지금** // 세종시는관광 저자체는숙원이

**청호평론** // 을 현해 서민, 고용정책만드시 성공해야

**부동산카이드** // 각종부동산 개발과 정책 변화

등권 제22호  
2010. 1

»»»  
PHOTO  
ESSAY

## "희망찬 경인년(庚寅年)을 기대하며"

경인년(庚寅年)의 한 해가 밝았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백(白)호랑이'의 해이기도하다. 백호(白虎)의 강인한 기세를 받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힘찬 해이길 기원한다. 올해는 더 따스한 마음으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꿔보자. 글/우성덕취재팀장



# Contents

PHOTO ESSAY	02	"일출"
NEWS WIDE	04	국·내외 정치 경제의 주요 뉴스
COVER STORY	06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소개
정책제안	10	도시주택정책 지방에 관한 이양해야
정책조명	12	지자체, 국책사업 줄줄이 내년으로'
기획특집	14	대구시 정책연구용역 외자업체 밀어주기 지나치다
인물FOCUS	18	가축분뇨처리 세계적인 권위자, 상주 공무원 황인수씨
테마산책	20	강원도 겨울 축제
지자체는 지금	22	'세종시 논란', 지자체는 속얌이
개정법규	24	최근 개정법규 소개
법령해설	25	국가법령 해석
계약리뷰	26	지자체, 각종 사업계약 지역업체와 체결 많아해
청호평론	27	을 한해 서민, 고용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부동산가이드	28	각종 부동산 개발과 정책변화
생활경제	30	'호랑이 해' 소비 트렌드는 'TIGEROMICS'
재테크	31	재무설계사 기고문
정책포럼	32	경북문화콘텐츠 정책포럼 창립
리더 추천릴레이	34	미립회계법인 류 현진 대표

##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3만원 | 신청방법 T. (053) 766-1368 | 이메일 wsd79@naver.com  
 성함·주소·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하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름 기재)  
 구독료 납입계좌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에코

## <독자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과 평론 및 현장경험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크기 10) 분량으로 경영저널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번지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이메일. wsd79@naver.com

경영저널 [www.ecomanagement.co.kr](http://www.ecomanagement.co.kr)

통권 제22호 | 발행인 이진구 | 편집국장 조종성 | 등록번호 경북다아123 | 창간 2007년 11월 5일

편집위원 이준현, 정성민, 윤일형 취재팀장 우성덕 | 기자 이준현, 장경태, 홍순대, 손지강

서울·경기취재본부 031472-2061 울산·경남취재본부 052223-2261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약5길 18 1동 301호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E-mail chojs333@naver.com | 가격 2,500원 |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전통시장 살리기' 문화부 중기청 손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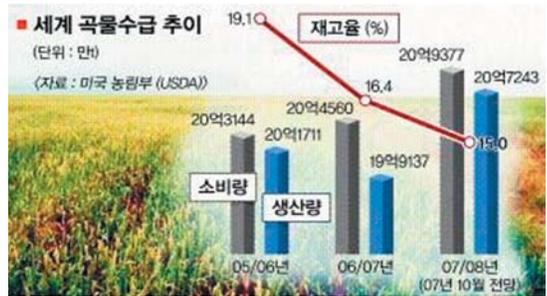


전통시장을 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이 업무협약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달 17일 장관 접견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그 동안 중기청은 지역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하고, 문화부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향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문성을 살린 컨설팅 지원 및 관련정보 공유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문화시설·고객편의시설 등 기능별 시설과 상징물·조형물·테마거리 조성 등 하드웨어 부문을 지원하고, 문화부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문화공연 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지원하게 된다.

## 내년 세계경제 '애그플레이션'에 주목

2010년에는 농산물 수급상황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곡물가격의 폭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비 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 더블딥과 같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우선, 국제 곡물가격이 심상치 않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55개 식료품의 수출가격으로 구성된 FAO 식량가격지수는 지난달 11월까지 한해 동안 16% 급등했다. 지난해 천 430만 톤에 불과했던 전 세계 곡물 잉여생산량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해 7천 310만 톤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소비 회복 속에 천 11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내년에는 쌀, 콩, 옥수수, 설탕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의 애그플레이션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내년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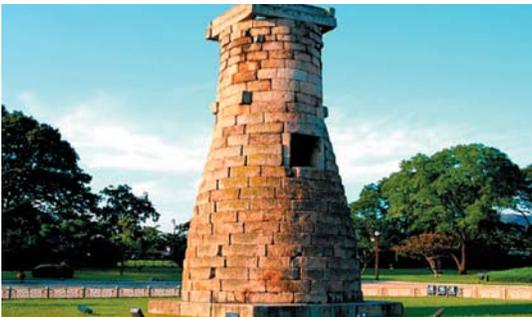


## 충북 북부 '역사·문화관광 거점' 개발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대가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거점 장소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충북 면적의 13.1%에 달하는 이들 지역 975.75km<sup>2</sup>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특정지역 제도는 지난 2002년 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자원을 특정산업으로 육성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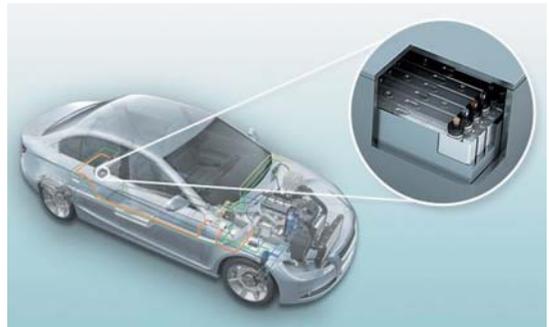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비 전액을, 관광사업 등은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중원문화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중부내륙지역으로 선사시대부터 삼국,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가 담긴 복합문화 권역이다.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조7천274억원을 들여 역사문화자원 복원, 지역 관광자원 정비·조성 도로·교통 기반시설,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 경북도 선덕여왕 유적지 관광인프라 개발



경북도가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선덕여왕'의 역사적 발자취를 재현하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나섰다. 경북도는 경주를 한류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방송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선덕여왕'의 3대 대표 유적지인 여근곡(女根谷)과 선덕여왕릉, 나왕대(羅王臺)를 2010년 20억원을 들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선덕여왕이 백제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건천 여근곡은 산책로를 개설하고 진입로를 확장한다. 또 전망대와 전시관을 건립한다. 선덕여왕릉은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주차장과 산책길, 낭산 둘레길 등을 만들고 스토리텔링 안내판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선덕여왕이 매료된 서면 운대리에 있는 야트막한 아산인 나왕대(羅王臺)에는 관광객들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도록 산책로와 목재 데크와 정자 등 편의시설도 만든다.

## 울산시 올해 시정 베스트 1위 SB리모티브(주) 유치



울산시는 올해의 시정 베스트 1위로 친환경 전기자동차용 리튬2차전지 생산공장 SB리모티브(주) 유치를 선정했다. 2위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성공적 개교, 3위 성암소각장 폐열이용 스팀 생산, 4위 전국 최고의 브랜드 택시 탄생, 5위 태화강과 동천강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망 조성을 꼽았다. SB리모티브는 삼성SDI와 독일의 자동차부품업체 보쉬(社)가 합작한 회사로 삼성SDI 울산사업장 안에 리튬2차전지 생산공장을 건설, 2011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양산한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인 끝에 울산이 유치에 성공하면서 2014년까지 1조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울산과기대의 성공적 개교는 울산이 첨단 생산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과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전국 최고의 브랜드택시는 올해 태화강를 800대와 고래를 800대가 각각 출범해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태화강과 동천강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망은 시민의 휴식과 레저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주요 시정을 대상으로 11월 10일~12월8일 70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베스트5를 선정했다.

»»»

COVER  
STORY

##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다. 우리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행정혁신을 통한 효율화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자체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자체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을 찾아가 봤다. 노성덕 취재팀장



## 각 분야 최고 연구진들의 과학적 정책결정, 최고 성과품 제공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사장 이진구)은 경제, 경영 산업 등 각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연구원은 각 분야별 과학적 정책결정과 독자적인 분석기법 개발로 최고의 성과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각 분야 최고의 연구진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은 2001년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사업 분야는 재정경제연구사업과 경영정책연구사업, 원가회계연구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연구원은 '고객감동, 연구정진, 최고의 성과품, 세계일류 연구원' 을 4대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고객감동은 정확하고 신속하고 품질의 성과품 제공과 A/S의 철저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 또,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연구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 정진을 위해 애쓰고, 최고의 생산품 생산을 위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해당 분야별 석, 박사 30여명, 원가분석사 7명,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뭉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첨단 연구기법 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그동안 쌓은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구상 및 사업 수행으로 미래지향적인 연구 성과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회계제도 연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영,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진구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연구사업 수행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대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목적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최고의 연구 성과를 통해 지역사회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 엘리트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과학적 연구진행 절차로 주목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체계적인 연구 진행 절차로 최고의 성과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부서 회의를 통한 목표설정, 방향설정을 위한 컨셉 수립을 시작으로 전략수립 단계인 개념정립, 자료 수집을 통한 데이터 구축, 연구 분석을 통한 세부 연구 진행, 최종 점검 등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을 소집, 네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연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 절차와 의사 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정책결정은 지난 2005년 헤럴드경제가 주관한 '엘리트 이코노미스트상'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진구 이사장은 "우리 연구원은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으로 최고의 보고서를 수행하고 있다"며 "각 분야별 관련 이론체제 정립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해 엄격한 심의 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경제연구사업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공공요금(상,하수도, 버스/택시 등 운송요금, 도시가스 등) 산정 연구를 비롯해 신규사업 계획,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 등 다양한 경제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은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과 기초자료 조사 연구를 통해 재정분야의 타당성 연구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다년간 경험을 지니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크게 증가해 경제분야 24건, 재정분야 48건, 계획수립분야 44건, 상하수도요금 48건, 버스/택시요금 산정 44건 등 200여건 가량의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 이외에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경기도 안양시의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운영성과 평가 용역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충북 영동군의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시행하며 연구원의 사업망을 대폭 넓혀나갔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경남 의령군(유동회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비롯해 경북 경산, 안동, 울진, 의성 등 각 지역에서 활발히 사업 전개를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송, 봉화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과 성주군 신재생에너지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여천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등 모두 13건의 사업 실적을 거뒀다.

## 경영정책연구사업

경영정책연구사업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계획서, 경영지급지원, 경영전략 등 경영컨설팅 연구분야와 정부 및 기업의 조사분석을 통한 경영진단 분야, 정책수립 연구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정책수립 연구분야의 경우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정책방안 연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 예술, 정보, 체육, 관광, 산림분야 정책방안 연구를 비롯해 여론 시장조사 연구 등을 통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구실적에서도 지난 3년간 경영진단 24건, 정책수립 56건 등 100여건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대구 달서구, 달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원가계산용역을 비롯해 경기도 안양의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계획, 경남 함양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등을 진행했다. 또 경북 안동의 학가산 온천 시설운영비 산정 연구용역과 강원도 영월군의 박물관과을 연계 신규미를 개발사업 연구용역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올해는 영양 고추유통공사 경영평가 용역과 주치단속요원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진단 연구 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원가회계연구사업

원가회계 분야는 제조, 공사, 용역 원가계산 및 실시설계 확인검토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로 명성을 쌓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자치단체 수행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원가적정성 검토, 기타(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량 등)특수 원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정부원가계산제도 연구 등 계약, 회계제도 연구분야에서도 발을 넓히고 있다. 연구실적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원가계산 150건, 제조원가 230건, 공사원가 270건, 용역원가 260건 등 910여건의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해 경상북도가 발주한 경부운하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원가계산용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경북권 통합운영시스템 제조 및 구매설치 원가계산용역 등 다양한 발주처의 사업 40여건 가량을 수행했다. 올해도 독도 모형제작 디자인 설계 원가계산 용역과 2011육상선수권대회 입장권 가격산정 원가계산 용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신청 용역 원가계산 등 80여건의 사업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연구원은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토 연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시장 여론조사와 개발비용 산정 및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로 신뢰를 쌓고 있다. 게다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인 및 민간기업의 의리를 배제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각 시군구의 개발부담금 검토만을 고집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개발부담금 검토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인 비용 산정으로 점차 사업 실적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연구 실적은 계약금액조정 80건, 개발부담금 산정 100건, 개발부담금 검토 70건, 물가조사 80건 등을 기록했다. 발주처도 개발부담금 관련 용역의 경우 대구시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대구지역 각 기초단체의 업무를 도맡아 진행했다.

## 연구용역 수행의 모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

연구용역은 제대로 발주, 수행, 활용된다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물론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연구용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설립 조건도 완화되면서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익논리만 따져 검증받지 못한 연구기관의 등장은 전체 연구용역 기관들의 신뢰도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이사장은 “연구기관 설립 조건이 완화되면서 제대로 검증받지도 못한 연구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문이 많다”며 “검증받지 못한 연구기관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 그만큼 위험성도 커졌다”고 했다.

이에 일부 연구기관들의 경우 종합적 관리체계 취약과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 부족 등의 집요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흡한 연구분석 및 결과 보고서 발주처의 활용도 및 결과 평가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예산낭비는 물론 연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위험도 높다. 잘못된 연구용역은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로 인해 관련 기관들은 용역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가져올 소지가 큰 것이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도약의 힘찬 날개짓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의 이익을 담당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밀착해 한발 앞선 연구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항상 연구진진 노력해 과학적 사고와 객관적인 능력을 배양해 신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가치관을 정립할 것”이라며 “작은 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류 연구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정책제안 편집국

### 정부 주도 도시 및 주택정책 지방에 권한 이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도시 및 주택정책은 전국 도시의 획일화는 물론 중앙과 지방간 도시개발 계획의 차별성 극복에 한계를 가져오게 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계획 및 개발은 도시 인구의 빠른 증가를 가져와 양질의 주거환경과 도로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공원과 위락시설 등 도시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공급은 적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발생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40여년간 도시주택정책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친 주택 대량공급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도시개발 때문이다.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춰 온 정부 도시주택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도 이런 부문에서 비롯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도시주택정책은 해당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이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도시주택정책 중앙과 지방의 엇박자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전체 사무 중 중앙 권한이 80%, 순수 지방사무는 20%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분권원리에 입각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됐지만, 도시주택분야와 관련된 사무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특히, 도시주택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중앙정부에 예속된 권한은 부작용 초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도 헌법(제117조)에서 인정하는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한 자치사무로 지방이양 대상 사무가 아니라 환원대상 사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중앙정부는 이로 인해 주택의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간섭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도시정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도시계획 및 주택계획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한다. 또 중앙정부가 전국의 도시계획을 통제함에 따라 전국 도시의 획일화, 물량위주의 주택 공급,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선 계획-후개발 체계와 지역의 정체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도시계획 권한 지방이양 필요성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 스스로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도시계획과 개발을 결정해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간 경쟁시대를 맞아 국가의 지역계획과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 자체적인 계획 수립의 어려움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 지역은 스스로 계획을 입안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공익성과 효율성, 경제성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큰 설득력이 생긴다. 또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의 책임성이 가중돼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 도시·주택정책 권한 지방이양 성과 있지만 여전히 미흡

이런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많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09년 6월 대통령 산하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도시 및 주택정책에 대한 4대 핵심과제(①도시개발, ②택지개발, ③보금자리주택, ④주택공급 권한)를 선정, 개선을 건의했다.

이런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법률 개정을 요구해 일부 정책의 지방이양 추진 성과도 있었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9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100만㎡ 이상 사업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협의로 개정, 광역단체장의 정책 방향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느정도 가능해졌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의 권한이 '면적에 관계없이(단, 330만㎡)는 사전승인 필요) 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도의 구역지정의 자율권을 확보했다

### 지역에 적합한 주택정책 추진 절실

도시인구의 급증에 따른 주택의 양적 팽창은 오히려 도시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량 물량공급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방 정부에 갖가지 부작용도 안겨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택 안정화와 지방정부의 개발 능력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에서 지방이양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 시점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대량의 주택건설과 공급의 시급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자체도 주택정책 수립과 집행관리, 재원미련 능력 등은 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계획 기준과 공급기준은 주택 유형을 획일화 시키고 각종 자원의 낭비와 과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만든다. 경제가 고도화되고 정부정책 중 주택과 건설 부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이상 주택이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게다가 지방의 자율적인 개발 계획을 통한 주택유형과 공급의 다양화를 시도함으로써 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 지역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 국가가 필요시 토지주택공사 등이 국가 목적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도록 해 일부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모두 도시계획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도시계획권(도시 및 주택정책)원칙이 잘 실현되고 있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효율적 개발에 일조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나 계획 방침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지방이양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수권능력을 가진 지방정부 만들기 동시에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지방분권 원칙을 세우고 도시계획 및 주택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인 도시공간 이용과 차별화된 도시 공간 활용, 지역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주택정책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 대형 국책사업 줄줄이 내년으로 해 넘겨

### 정책조명 정부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에 지자체간 갈등만 키워

동남권 국제공항 입지선정 등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다.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자체간 국책 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했지만, 결국 중지를 찍지 못하고 갈등과 앙금만 키운 꼴이 됐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함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원활한 사업 조정 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높다. \_홍순대기자

### 해 넘기는 대형 국책사업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당초 올 9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간 유치경쟁이 격화되자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한 상태다. 또, 국토해양부는 용역결과와 최종 후보지를 함께 발표하기로 한 계획을 바꿔 우선 후보지는 빼고 용역결과만 발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후보지최종 선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당초 2011년 착공을 목표로 한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전북과 경남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혁신도시내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 경쟁은

정부가 쉽사리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해 두 지역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주택공사는 진주, 토지공사는 전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두 공사가 통합되면서 통합 본사를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돼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경남은 본사를 비롯한

통합 LH 일괄이전 방안을 내놓았고 전북은 본사 조직의 핵심기능 24.2%는 전주로, 나머지 사업부서는 진주로 가는 분산 배치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경남 진주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여 남을 물을 부산으로 공급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도 경남의 강력한 반발로 영거주춤한 상태이다. 부산시는 깨끗한 상수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남강댐 주변 진주시와 사천시는 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인을 위한 '국제병원'을 설립하는 사업도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또 해를 넘길 전망이다.





## 내년에는 풀릴까..지역 현안들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부터 경남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발전소와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군 70여km에 걸쳐 송전탑 123기를 설치하는 765kV 북경남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69기의 송전탑과 39km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밀양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연경관 훼손과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 한전측에 지속적인 송전선로 변경과 송전탑 이격을 요구하며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한전측은 "내년말까지 송전선로 사업을 완공시켜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보낼 수 있다"며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 조성사업도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의 자금난이 원인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자칫 사업 무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태백시가 폐광 대체산업의 하나로 2006년 착공한 태백국민안전체협테마파크 조성사업, 춘천~양구 간 배후령 구간의 고갯길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도 국비 등 예산부족으로 완공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국책사업 지연, 지자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 사회 손실 막대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국책 사업의 경우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발표해야 한다. 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협조를 당부하고, 사업 결정에 있어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이 공식화되면 사업의 장기 표류는 물론 지자체의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이에 국회가 관련 법안 심사 등 제 기능을 못해 주요 국책사업과 현안들이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한 질타도 적지 않다. 각종 국책사업들이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지역간 이해관계에 얽매이면서 눈치보기를 통해 실질적인 분석과 합리적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 문제에서 보듯 지역 실정을 모른 채 결정되던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렵다.





## 대구시 정책연구용역 외지업체 밀어주기 지나치다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계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큰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예산 낭비의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 연구기관들은 대구시가 사업 수행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지기관에 용역을 밀어주고, 이로 인해 과도한 용역비 지급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_우성덕취재팀장



## 지역 연구기관들, 외지업체 밀어주기 불만 많아

지역 학술연구기관들이 대구시의 정책용역계약이 외지기관 배불리기와 용역 적절성을 놓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신축 적정 규모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7천여 만원을 들여 A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용역심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추진했다. A 연구원은 서울에 위치한 학술연구기관으로 시는 이보다 앞서 2005년에도 신청사 이전 건립 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1억여 원을 들여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학술연구기관에서는 같은 연구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 외지 기관에 맡긴 것은 지역 기관들에 대한 홀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가 수의계약을 위해 줄속으로 '심의 위원회'를 열어 공개 입찰을 피하고, 외지 기관에게만 이익을 챙겨줬다는 불만도 높다. 대구지역 한 학술연구기관 관계자는 "대구시가 지난 2005년에 이어 올해도 또 다시 같은 용역을 같은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입찰 경쟁이 아닌 외지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역을 배려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0월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마스터플랜 구상을 위해 17억 원을 들여 미국의 경영컨설팅사인 '모니터 그룹'과 맺은 계약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연구기관이나 학계 등에서는 용역 수행기간이 3개월인데 비해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고, 이 기관의 경우 대구시 대표의 실패작인 '밀라노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한 기관으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역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에 비해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계 업체가 아닌 국내기관에 의뢰해도 유사 연구용역과 비교하면 5억원 이하면 충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측은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은 심의과정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문제될 게 없다"며 "첨복단지 용역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한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시,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 너무 높다

대구시의 정책연구용역이 지나치게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대구경실련)가 지난해 대구시의 정책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3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 등) 용역 가운데 정책연구용역은 총 21건으로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은 52.4%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반면 입찰은 38.1%(8건), 기타 9.5%(2건)에 불과했다. 반면, 심의대상 기술연구용역은 전체 용역계약 총 25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불과 1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입찰(24건) 등으로 진행돼 대조를 보였다. 이는 수의계약이 용역수행기관과 용역 내용, 결과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정책연구용역기관 선정에 있어 대구시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업체 선정에 두고, 끊임없는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경실련측은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용역기관,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운영)법령에 정해진 수의계약기준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2008년 심의대상 학술연구용역 계약방식>

구 분	건 수	비 중
입찰	8건	38.1%
수의계약	11건	52.4%
기타	2건	9.5%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졸속 형식적 절차에 그쳐

대구시가 정책연구용역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용역의 필요성, 사전 심의, 진행 상황 점검 등을 비롯해 용역 계약의 중요 내용, 용역 결과 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 집행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 절차는 그동안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3차 세차례 걸쳐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대상 44건 가운데, 95%이상인 41건이 2008년 10월 개최된 2차 회의에서 모두 승인됐다. 이를 위해 소요된 시간은 불과 3시간 30분.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 회의 시간에 무려 41건에 달하는 용역 보고서가 심의를 통과한 셈이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검증,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실련측은 "조례가 대구시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정책연구용역 운영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정보공개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용역 계약의 주요 내용,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빠져있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용역 현황>

\*용역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계	
	건 수	용역비	건 수	용역비	건 수	용역비
08년 제2차회의	21건	5,022	20건	10,312	41건	15,334
08년 제3차회의			4건	1,850	4건	1,850
08년 제1차회의			1건	200	1건	200
계	21건	5,022	25건		46건	

## 대구시, 정책연구용역 개선책 마련해야

정책연구용역의 중요한문제점 중 하나가 활동되지 않는 용역이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해 용역을 위한 용역, 부실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용역은 단순히 용역에 소요된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2,3차 피해로 이어진다.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밀라노프로젝트는 잘못된 용역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한 대표적인 경우다. 또 최근 대구신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마스터 플랜 등 대구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수의계약 등에 관한 우려도 이런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금까지 용역의 심의 과정과 용역 내용, 결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점검 등 복합적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용역 발주와 계약,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대구 경실련측은 “대구시가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그 내요를 충실하게만 이행한다면 관련 조례만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용역 현황(2003년~2008년)

구 분	용역건수	용역금액
2003년	51건	15,087,467,000원
2004년	43건	8,194,310,000원
2005년	55건	8,877,529,000원
2006년	43건	4,770,388,000원
2007년	63건	6,376,998,000원
2008년	98건	11,484,184,000원

### 대구광역시 용역비(2003-2008년)

구 분	건 수	비 율
1천만원 이하	27건	7.6%
1천만원~3천만원	110건	31.2%
3천만원~1억원	107건	30.3%
1억원 이상	109건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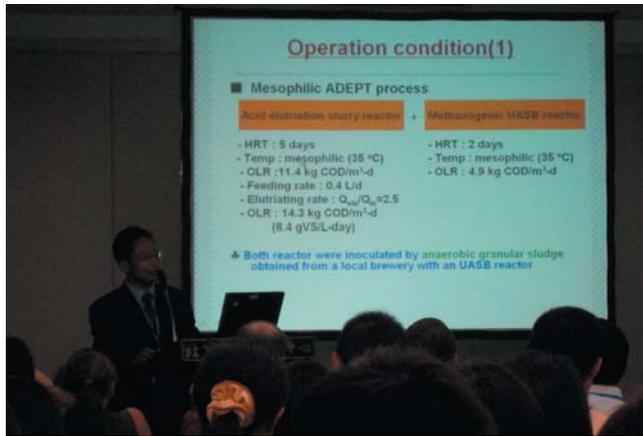
구 분	건수 및 비중		금액 및 비중	
	건 수	비 중	금 액	비 중
공개경쟁	89건	25.2%	31,788,152,000원	58%
지명경쟁	27건	0.6%	105,000,000원	2%
제한경쟁	97건	27.5%	7,670,473,000원	19.2%
수의계약	165건	46.7%	15,227,251,000원	27.8%

## 경북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 황인수(43,환경7급)씨 가축분뇨 처리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우뚝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황인수씨(43세, 환경7급), 그는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에 있어 세계적인 전문가로 통한다. 겉보기엔 평범한 공무원이지만, 그의 학식과 연구 실력, 연구 논문 등은 관련 분야에 있는 대학교수나 연구원들 못지않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파고들어 '공부하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며 귀감이 되고 있다. \_ 우성덕취재팀장

###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에 등재

평범한 공무원이 가축분뇨처리와 자원화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로 우뚝 섰다. 황씨는 가축분뇨의 처리와 자원화에 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인명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의 2010년 세계판(2009년 11월 출간)에 등재됐다.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현직 지자체 평범한 공무원이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는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I)', '영국의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 발행처다. 189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이래로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정보의 정확성 및 까다로운 인물선정 기준 등으로 유명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리더를 선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력과 사회활동 등을 평가해 인사를 선정하고 있다. 각 전문분야별판, 미국판, 대륙별판 및 세계판 등으로 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황씨가 등재된 인명사전은 세계판인 'Marquis Who in the World'로서 학력 및 학위, 전문자격, 경력 및 관련사항은 물론 그가 이뤄낸 이론 과 실무 연구성과 등 다양한 성과물이 수록됐다.



### 탁월한 전문가, 세계적인 국제환경학술대회와 SCI급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 게재

환경공학박사 겸 수질관리기술사인 황인수씨는 그동안 지속적인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국내는 물론 국제 환경학회에서도 이론과 실무 및 연구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전문가로 평가받아왔다. 대외적으로 그는 정부신지식인(2001), 대통령주재 청와대 오찬간담회 사례 발표자(2002) 및 대구경북 뉴리더(2003)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가축분뇨의 최첨단 고농도 질소제거와 자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환경학술대회와 SCI급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뤄내 세계적인 권위의 SCI급 학술지인 'Enzyme and Microbial Technology'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돼 외국 학자들의 논문을 심사하기도 했다. SCI급 전문학술지란 과학기술논문의 국제발표순위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척도가 되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논문학술지로 자연과학의 경우 Nature지, Science 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국내에서도 전문기술 및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TV 방송 등에 환경전문가로서 다수 출연해 왔고, 한국물환경학회 평의원(Councilor, 11~13대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의 가축분뇨처리분야 자문위원, 산업현장기술지원센터 자문교수, 환경부 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교수 및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획기적인 예산절감방안, 정부로부터 모범사례 선정

그는 그동안 환경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환경부 및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되는 쾌거도 올렸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에 걸맞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수의 액비화 방안”을 수년간 연구, 전국 최초로 상주시가 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적용해 2008년 정부 예산절감 사례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 사례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액비화 시범사업”의 토대가 되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획기적인 예산절감방안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에 근거한 고농도 가축분뇨 처리 연구와 돈사분뇨로부터의 유기성 자원 회수(유기산, 메탄)에 대한 공법 연구, 자원 회수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유출수의 효율적인 처리 공법 연구 등으로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이는 돈사분뇨로부터 자원 회수와 유출수의 처리가 결합된 경제적이고도 확실한 세계적인 최첨단 공법 연구단 평가와 함께 세계적 권위의 SCI급 국제 학술 논문지인 “물의 과학과 기술지(Water Science and Technology)”에 연구 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를 재활용해 저비용, 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특허 3건을 출원, 등록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분야 계속 연구해 나갈 것

향씨는 고향인 경북 상주시에서 상영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상주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북대학교에서 학부(미생물학과)와 대학원과정(환경공학과)을 마쳤다. 1997년에 공채로 상주시 환경직 공무원으로 입문했고, 공직생활과 학업을 병행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인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탁월한 이론과 실무 및 연구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2006년에는 경북대학교 사이버홍보 웹진 ‘자랑스러운 KNU 동문’으로 등재,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전문자격으로 수질관리기술사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환경 5개 부문 특급기술자(수질환경, 수질관리, 대기환경, 대기관리, 폐기물처리)로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도 국제주요학술대회 등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항상 연구 노력하고 정진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 Policy

## 지자체는 지금

— 손자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세종시 '원안'이 '수정안'으로 추진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를 '경제(기업)도시'로 바꾸겠다고 하자 그동안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던 지자체들은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세종시, 정부 파격지원 약속..지자체 한숨만

지자체들은 토지 저가 공급 등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인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칫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경제 영역을 모두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는 지금까지 공들인 각종 투자유치 계획이 조금씩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 발표 이후 지방투자 예정 기업 가운데 실제로 세종시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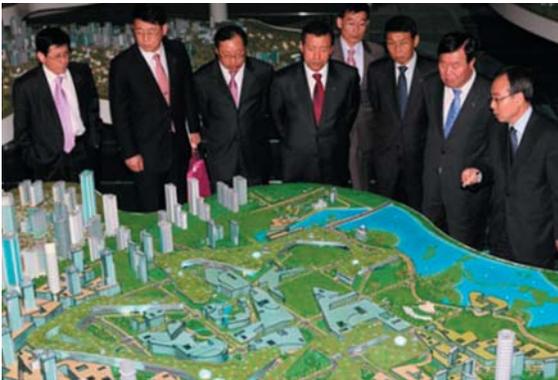
이는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건설에 공을 들여온 충북과 대구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도의 명운을 걸고 유치한 첨복단지 계획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정부는 세종시에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스턴 의대 등 세계 우수 의대와 병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현지 투자설명회까지 여는 등 활발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미 미국의 유명 의료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고려대가 바이오메디컬 단지(약 132만㎡)를, KAIST가 바이오 및 메디컬, 에너지 등 신개척 분야 연구와 벤처 육성 단지(165만㎡)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휩싸여있다. 또 의료와 함께 교육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도 '헛 걸음'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대구경북은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의 세종시 교육특구 정책이 갑자기 수면 위로 치솟으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대·고려대·KAIST 등의 대학은 이미 세종시에 2캠퍼스 설치를 고려 중이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충북 오송과 새만금 산업단지 산단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 경북 구미, 김천 등도 빨간불

경북도도 내년부터 조성공사가 시작되는 구미와 포항산업단지에 분양 차질을 빚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김천이다. 김천시는 김천산업단지에 롯데그룹 맥주공장을 유치하고자 물밀접촉을 벌여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여전히 유치는 안갯 속에 가려져 있다. 롯데 측 이미 실사단이 김천산업단지를 다녀갔고, 30여만㎡ 부지를 요구하는 등 실무적인 부분까지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호언장담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구미시 역시 걱정이 앞서는 마찬가지다.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건설과 분양을 앞둔 구미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세종시가 기업중심도시로 변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미시 역시 기업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경북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특화산업 육성 2014년까지 3,006억원 투입, 3개 권역 개발

경북 군위군 일대에 대규모 관광 휴양, 레저 단지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경상북도 군위군(1읍 7면 30리) 일대 35.59㎢(군면적의 5.80%)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구 지정은 8월 군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개발 계획에 따라 군위군은 지역 내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산업단지, 전원주택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이 집중 개발된다.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4년까지 총 3,006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관광휴양단지, 지역특화단지 등이 들어선다. 위천수변 레저산업 복합지구(2.09㎢)에는 위천을 중심으로 한 군위의 동서지역과 남부지역의 친수경관자원을 이용, 생태공원 및 체험공원이 입지한다. 또, 팔공산 청정 생태체험 휴양지구(8.63㎢)에는 팔공산에 인접한 부계지역의 독특한 역사 및 돌담 문화체험, 청정 특산물(사과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삼국유사 하이스토리 문화탐방지구(5.87㎢)에는 화북 댐의 생태공원 조성공간과 연계해 삼국유사 문화랜드 탐방공간이 조성된다. 이와함께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접근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이를 통해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의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뇌물제공자, 내년부터 지자체 발주공사 배제 공사 연대보증인제도 2011년 폐지

내년부터 뇌물 제공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 사기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또 대형공사 설계 심의 등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거나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는 행안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 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공고내용이 법령에 어긋났을 때는 업체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는 반드시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대보증인 제도는 연쇄 부도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폐지된다. 시공자가 직접 공사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는 내년까지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되고,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에 교부되는 국고 보조금이 동일 연도에 여러 차례로 나뉘어 지급될 경우 지자체들이 우선 총액을 기준으로 입찰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후속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장설명 의무화 대상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건설기술 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한편 조달청은 뇌물 등으로 제재받은 업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2년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 영세업자 18개월 세금납부 유예 카드납부 한도 500만원으로

내년부터 연간 매출이 6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는 최대 18개월간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소액 체납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체납자로 제공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양도세 신고 때 양수자의 인간증명서를 내게 하는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면제해 주는 조치의 만료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분(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세금을 물지 않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 "지자체 관리재산, 사유재산과 교환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공원 부지로 지정한 개인의 사유재산과 지자체가 보유한 다른 지역의 행정재산을 맞바꿀 수 있는지를 문의한 부산 기장군의 문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 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재산의 교환 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행정기관, 과태료 부과위해 세무관서 납세정보 요구 못해"

행정기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세무관서에 납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납세정보의 제공을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서울 영등포구의 질의에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를 위해 요구하는 행정정보에 세무관서의 납세정보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과세정보는 조세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보호 및 '국세기본법' 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일반적인 자료 등의 제공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료 또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특정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지자체, 각종 사업 계약 지역업체와 체결하는 경우 많아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사업의 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 계약한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등 각종 사업의 85.5%를 지역업체와 계약했다. 시는 각종 공사에서 154억8000만원, 용역 181억원, 물품구매 47억원을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등 지난해 지역업체와 맺은 275억원보다 108억8000만원 많은 383억8000만원을 계약했다. 이는 올해 총 사업비용 448억9000만원의 85.5%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4%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IPA)도 앞으로는 지역업체와 계약 우선 체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A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내 건설, 서비스, 용역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IPA는 수의계약 업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금 1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은 인천항 주변 업체에 우선적으로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관급공사 및 각종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 자재 등을 공사 설계 때부터 우선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도화하기도 했다.

»»  
**계약리뷰**  
\_장정태기자

## 내년부터 물품구매·용역 적격심사 '온라인 가능'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와 용역 계약의 적격심사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에 물품구매 및 용역업무의 온라인 적격심사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1월 1일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의 모든 적격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내년 2월 말부터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수요기관에서도 이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 적격심사 행정소요일수(10일-11일)가 대폭 단축돼 업체의 기관방문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 최소 3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난 2002년 9월 나라장터 개통과 함께 전산화됐지만, 그 동안 물품구매와 용역업무의 적격심사는 심사항목이 53개나 되는데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기관이 45개 기관에 달해 온라인상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자료인 납품실적, 기술인력 현황, 각종 인증서 등의 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각 기관을 직접 방문, 자료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해야 되던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계약체결 시까지의 과정이 장기간 소요됐다.

또, 조달청은 심사항목(납품실적, 고용사실확인, 납품지연, 인력정보, 신용평가등급, 제품인증, 불공정거래정보 등)을 관리하는 각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는 물론, 시스템 미보유 기관에 대해서도 나라장터에 심사항목을 직접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가장 연계가 어려웠던 고용사실 확인을 위한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관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연계에 합의함으로써 적격심사업무의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조달청측은 "그 동안 물품구매·용역의 적격심사는 심사항목과 관리기관이 다양해 온라인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각 기관이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 온라인 적격심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올 한 해 서민, 고용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참여한 가운데 서민, 고용 분야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지난 연말까지 잇따라 실시된 교육, 과학, 문화 등 7개 분야 새해업무계획 보고 가운데 첫 번째다. 내년 정부정책 운영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두고 서민, 고용 분야에 대한 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와 고용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 하반기부터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재계와 금융계 등에서는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 정부가 서민정책을 중심에 두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판단에 근거했을 것이다. 경기가 불황일 때 가장 피해가 크고, 경제가 회복되도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 층이고 서민이고 보면 정부의 정책 중심은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특히,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도 서민 정책에 따라 정권 운영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 만들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고용 한파’ 극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내년 최우선 과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만명 줄어든 238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에 치명적인 ‘고용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증거다. 정부와 정부기관 등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 수준인 4% 중반 혹은 이보다도 높은 5% 내외를 예측하고 있지만,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 예상대로 내년 일자리가 20만개 정도 생기더라도 작년과 올해 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10만명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정부가 앞다퉀 내놓은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주력해야 할 이유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대학 및 전문계고 졸업생 80만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개의 정보를 담은 일자리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기업의 인사, 노무 경력자를 취업지원관으로 150여개 대학에 배치해 진로설정이나 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범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조율키로 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 무엇보다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건물을 짓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 각 부처는 준비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의 허점이 곳곳에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구상과 고민을 해야 한다.

서민들은 고용과 가계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다. 내년 정책의 핵심인 ‘서민과 고용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 ‘호랑이 해 소비 트렌드는 ‘TIGEROMICS’

2010년 소비트렌드는 ‘TIGEROMICS’란 발표가 나왔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2010년 소비트렌드 키워드’란 보고서를 통해 10대 트렌드를 선정해 첫 글자들만 모아 ‘TIGEROMICS’로 요약했다. ‘TIGEROMICS’는 경인년 호랑이해를 상징하는 호랑이(tiger)와 경제학(economics)를 합성한 말로 ‘호랑이처럼 웅비하는 2010년의 대한민국 경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TIGEROMICS는 먼저 ▲한국의 멋을 찾을 때(Times for Korean chic) ▲떴다, 우리 동네(Into our neighborhood) ▲딴짓의 즐거움(Good to be geeks) ▲금기의 종언(End of taboos) ▲당신의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Ready-made to Order-made)으로 구분된다. 이어 ▲전지전능 솔루션(Omni-U solutions) ▲매너남녀(Manner matters) ▲물의 르네상스(It's aqua), ▲나이아~가라(Challenge your age) ▲스타일에 물들다(Style republic)로 나뉘었다. 김 교수는 소비트렌드 TIGEROMICS를 통해 2010년이 제3세대 한류가 시작되고 동네와 지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생활문화의 다양성 공존, 경쟁 영역 간의 크로스 오버, 기술 공개 등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편집국

## 정부, 올 소비자 물가 3%내외 예상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운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시현할 전망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의 경우 유가, 환율의 급등락 등으로 물가변동성이 컸지만, 올해변동성이 완화돼 내년에는 3%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은 유가 등에 민감한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다른 품목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전세가격 약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지금 수준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은 지난해와 올해 가격 동결로 인한 누적요인과 에너지 수요 관리 등을 위해 요금조절 필요성으로 인한 인상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물은 재배면적 증가와 사료가격 안정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 수입산 가격 안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봄 농축산물 공급량은 배추가 3.4% 늘어나고 ▲무 -2.9% ▲당근 0.7% ▲양배추 1.1% ▲한우 7.8%로 예상했다. 공업제품은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등은 가격 상승이 전망되지만, 다른 공업제품은 환율안정 등으로 가격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식부문과 같은 개인서비스는 원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동결된 대학등록금 등의 경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 “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모두가 부자 마인드를 갖고 부자되기를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

글/박관수재무설계사

### \* 부자가 되는 마인드 \*

1. 돈을 벌고 싶으면 경제흐름을 알아야 한다. (부자되는 최선의 방법)  
→ 공부안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부안하고 운전면허시험 합격하기를 바라는 견해와 다를 바 없다.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공부는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이제는 누구나 경제 신문하나를 봐야하지 않았는가, 더불어 지역소식을 가장 잘 분석해 놓은 지역신문을 통해 내가 속한 지역의 변화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2. 선진국형 부자가 되어라.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15위, 무역규모는 9위다. 이러한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룬 게 아니라 40년 동안 꾸준함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또한 개인의 경제 마인드도 선진국형으로 가져야하며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고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3. 부자는 가족이 만든다.  
→ 축구 선수 중에 업사이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길 수 없다. 가족 중에 family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한사람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자.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함께 의논해서 소비하는 구조를 갖자. 밑 빠진 독엔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4. 위험한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없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현재 상태를 냉정히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품을 줄이고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투자를 하는 우는 범하지 말자.

연말연시의 화두는 부자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경기가 좋지 않다지만 최근에도 재테크강의나 증시, 부동산 강좌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얼마전 대구지역에서 열린 모 증권사가 주최하는 '2010증시전망'에서는 행사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이처럼 이제는 투자를 가만히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 우린 항상 최후의 승자가 누군지, 어떻게 될지 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아는 것처럼 말이다. 거북이가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갖고 장기간 실천했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거북이의 마음, 그것이 부자의 마음이고 재무설계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이제, 올 한해는 심기일전하여 경제 감각을 익히고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자.**

1.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재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을 모아서 재테크 공부해야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를 모르고 흘려보낸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2. 주식 직접투자의 규모를 점검하라.  
→ 골리앗과 싸우지 마라. 워렌버핏(주식의 대부)은 바둑9단이 되거나 우량주를 10년이상 보유를 권유했다  
→ 자산의5%로 이내로 하라. 5%이상의 비율은 위험할 수 있다.
3. 신용카드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절제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체크카드로 대체하라.
4. 수입의 30%는 무조건 저축하라.  
→ 짊돌이가 되지 않으면 부자되기 힘들다. 부자를 욕하는 자는 부자되기 힘들다.  
종자돈 마련은 부자되는 첫걸음이다.
5. 재무제표를 작성해보라.  
→ 한 달에 한번 씩 현금흐름이나 재무상태를 점검하라.



## ‘호랑이 해 소비 트렌드는 ‘TIGEROMICS’

2010년 소비트렌드는 ‘TIGEROMICS’란 발표가 나왔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2010년 소비트렌드 키워드’란 보고서를 통해 10대 트렌드를 선정해 첫 글자들만 모아 ‘TIGEROMICS’로 요약했다. ‘TIGEROMICS’는 경인년 호랑이해를 상징하는 호랑이(tiger)와 경제학(economics)을 합성한 말로 ‘호랑이처럼 웅비하는 2010년의 대한민국 경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TIGEROMICS는 먼저 ▲한국의 멋을 찾을 때(Times for Korean chic) ▲떴다, 우리 동네(Into our neighborhood) ▲딴짓의 즐거움(Good to be geeks) ▲금기의 종언(End of taboos) ▲당신의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Ready-made to Order-made)으로 구분된다. 이어 ▲전지전능 솔루션(Omni-U solutions) ▲매너남녀(Manner matters) ▲물의 르네상스(It's aqua), ▲나이아~가라(Challenge your age) ▲스타일에 물들다(Style republic)로 나뉘었다. 김 교수는 소비트렌드 TIGEROMICS를 통해 2010년이 제3세대 한류가 시작되고 동네와 지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생활문화의 다양성 공존, 경쟁 영역 간의 크로스 오버, 기술 공개 등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편집국

### 정부, 올 소비자 물가 3%내외 예상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운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시현할 전망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의 경우 유가, 환율의 급등락 등으로 물가변동성이 컸지만, 올해변동성이 완화돼 내년에는 3%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은 유가 등에 민감한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다른 품목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전세가격 약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지금 수준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은 지난해와 올해 가격 동결로 인한 누적요인과 에너지 수요 관리 등을 위해 요금조절 필요성으로 인한 인상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물은 재배면적 증가와 사료가격 안정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 수입산 가격 안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봄 농축산물 공급량은 배추가 3.4% 늘어나고 ▲무 -2.9% ▲당근 0.7% ▲양배추 1.1% ▲한우 7.8%로 예상했다. 공업제품은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등은 가격 상승이 전망되지만, 다른 공업제품은 환율안정 등으로 가격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식부문과 같은 개인서비스는 원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동결된 대학등록금 등의 경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 “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모두가 부자 마인드를 갖고 부자되기를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

글/박관수재무설계사

### \* 부자가 되는 마인드 \*

1. 돈을 벌고 싶으면 경제흐름을 알아야 한다. (부자되는 최선의 방법)  
→ 공부안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부안하고 운전면허시험 합격하기를 바라는 견해와 다를 바 없다.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공부는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이제는 누구나 경제 신문하나를 봐야하지 않겠는가, 더불어 지역소식을 가장 잘 분석해 놓은 지역신문을 통해 내가 속한 지역의 변화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2. 선진국형 부자가 되어라.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15위, 무역규모는 9위다. 이러한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룬 게 아니라 40년 동안 꾸준함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또한 개인의 경제 마인드도 선진국형으로 가져야하며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고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3. 부자는 가족이 만든다.  
→ 축구 선수 중에 업사이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길 수 없다. 가족 중에 family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한사람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자.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함께 의논해서 소비하는 구조를 갖자. 밑 빠진 독엔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4. 위험한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없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현재 상태를 냉정히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품을 줄이고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투자를 하는 우는 범하지 말자.

연말연시의 화두는 부자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경기가 좋지 않다지만 최근에도 재테크강의나 증시, 부동산 강좌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얼마전 대구지역에서 열린 모 증권사가 주최하는 '2010증시전망'에서는 행사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이처럼 이제는 투자를 가만히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 우린 항상 최후의 승자가 누군지, 어떻게 될지 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아는 것처럼 말이다. 거북이가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갖고 장기간 실천했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거북이의 마음, 그것이 부자의 마음이고 재무설계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이제, 올 한해는 심기일전하여 경제 감각을 익히고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자.**

1.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재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을 모아서 재테크 공부해야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를 모르고 흘려보낸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2. 주식 직접투자의 규모를 점검하라.  
→ 골리앗과 싸우지 마라. 워렌버핏(주식의 대부)은 바둑9단이 되거나 우량주를 10년이상 보유를 권유했다  
→ 자산의5%로 이내로 하라. 5%이상의 비율은 위험할 수 있다.
3. 신용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절제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체크카드로 대체하라.
4. 수입의 30%는 무조건 저축하라.  
→ 짊돌이가 되지 않으면 부자되기 힘들다. 부자를 욕하는 자는 부자되기 힘들다.  
종자돈 마련은 부자되는 첫걸음이다.
5. 재무제표를 작성해보라.  
→ 한 달에 한번 씩 현금흐름이나 재무상태를 점검하라.